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강원도 제2청사 설치는 새출발의 상징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봄이 찾아왔다. 나무에는 새순과 새잎이 돋아나고, 꽃들은 활짝 피어나고 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태어나는 출범 원년이기도 하면서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여러모로 뜻깊은 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제시한 137개 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강원도청과 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몇몇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국, 1기획관, 11과, 5사업소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를 강릉에 설치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이자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강원도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춘천은 행정도시로, 원주는 혁신·기업도시 설치로 지속적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영동권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발전이 더뎠다.

이와 맞물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도 영서권 약 20조원(62%), 영동·남부권 약 18조원(38%)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영동·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과 행정편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2청사 개청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도 많은 부분 개선될 것이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난 1년간 여러 현안에 대해 협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고민한 노력의 산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렇지만,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다.

현행 법령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본부급(2급) 3개국 규모의 2청사로 시작하지만 향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안착된다면 추가로 2개국 규모의 조직이 추가돼 총 5개국 규모의 부지사급(1급) 청사로 확장될 것이다. 강원도 제2청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 공직자가 걱정하는 정주여건과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집행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강원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조선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왜곡된 수가·먹통 핫라인 해결해야 ‘응급실 표류’막는다

 동아일보 오피니언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세 살배기가 병원 11곳을 돌다가 의사 얼굴도 못 보고 숨졌다. 지게차에 깔려 다리가 부러진 30대 남성은 6시간 넘게 응급실을 떠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구급차와 응급실에서 37일을 보내며 밀착 취재한 환자 26명의 응급실 표류기는 의료 강국 한국의 무너지는 응급의료 체계를 아프게 보여준다. 많은 독자들이 “응급실 찾아 표류, 나도 겪었다” “아이가 응급실 갈 일이 생길까 겁난다”며 공감을 보였다.

한국은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응급실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다. 절대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기계로 하는 검사는 비싸게, 환자 살려내는 의사의 손기술엔 혈값을 매기는 왜곡된 의료수가 탓이 크다.

머리를 열어야 하는 개두술은 최소 6명의 의료진이 3시간 넘게 매달려야 하는데 환자 1명당 병원이 받는 돈은 274만 원 정도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신경외과 전공의 1년 차 111명의 12년 후 진로를 추적했더니 수술실을 지키는 의사는 10명뿐이었다. 불필요한 검사와 경증 치료에 쓰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 수술에 투입해야 하지만 정책 수혜자를 줄이는 일이어서 정부도 국회도 나서지 않는다.

의사와 환자를 이어줄 시스템도 고장 난 상태다. 119구급차에 탄 환자의 신속한 응급실 이송 대책은 정보 공유를 꺼리는 보건복지부와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소방청의 칸막이 행정에, 어렵게 구축한 병원 간 응급 환자 정보 공유 플랫폼은 국회의 입법 지연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결국 119구급대원들도 의사들도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느라 수십 번씩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찾다가 거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지만 그때뿐이다. 지난달 발표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핵심 대책 9개 중 8개는 5년 전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의 재탕이었다. 종종 외상 환자가 119 신고부터 응급실 도착까지 걸린 시간의 중위 값이 2015년 25분에서 2020년엔 32분으로 늘어났다.

구급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거리를 헤매는 ‘응급실 뱅뱅이’를 3분마다 1명꼴로 겪는다. 환자 10명 중 1명은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년 내에 응급수술 대란이 닥친다는 현장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 어떻게 해결했을까? 사례로 궁금증 해결!

-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을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 일상생활 속, 다양한 침해유형별 사례 한눈에 확인 -

[사례1]

ㄱ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자신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ㄴ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 앱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표기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3]

ㄷ씨 등은 지자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조정기구로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③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해유형	건수	침해유형	건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15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제공	23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	2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	16	기 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포함)	5
정보주체의 열람·정지·철회 등 요구 불응	13	합 계	79

-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사례로서,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 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누리소통망(SNS)·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들어있다.
-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②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23.3.14. 공포, 9.15. 시행예정)에 따르면, 올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신경제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활용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속적인 사례집 발간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높이고, 서로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과 분쟁조정위 누리집(www.kopico.go.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9개 기관에 배포되었다.

*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 < 자료 > 정책자료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www.kopico.go.kr) < 게시판 > 자료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4월 7일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 가능 -
-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 4월 7일(금)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및 검색,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 www.bokjiro.go.kr, 모바일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 가능
-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 (청년의 연령기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은 '1989년생부터 2004년생'의 경우 이용 가능
 - **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 * (신청절차) 복지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
 - ** 구체적 신청방법은 <붙임 3> 및 복지로의 '신청방법 상세안내' 참조
-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후, 만 18세에 도래해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청년으로 시군구,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한 보호 종료확인서 필요
 -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기간이 연장된 청년으로 해당 시설 및 센터에서 발급한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총 45종으로 확대된다.
 -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붙임 4> 참조
-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드립니다”

- 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수급 ‘누락 방지’ 법률 개정 추진 -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 수당·지원금 미지급 사각지대 해소 -
- 박민식 처장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 -

-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당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생계가 곤란함에도 고령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을 추진,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생계지원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월 22만원~33만6천원)이다.
-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수급희망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 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또한, 국가보훈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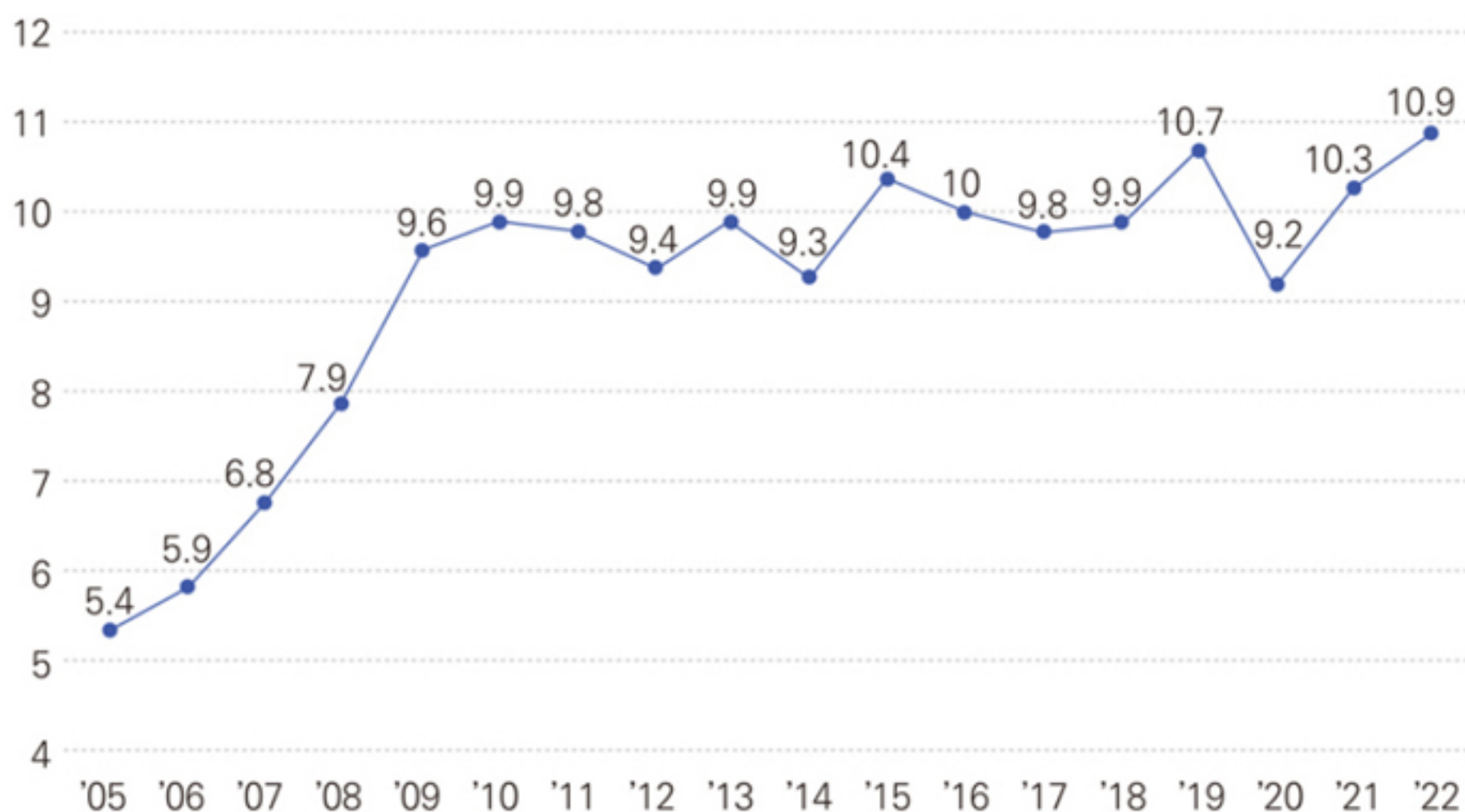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수술 필요하다

김 현 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성과가 미흡한 지역균형발전 1.0체제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토대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체제(1.0체제)를 만든 이후, 4개 정부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해왔음
 - 노무현 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정책의 반열에 오른 이후 적게는 5조원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입해오고 있음
 - 2005년 5.4조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이후 2022년까지 지난 18년 동안 164.2조원의 재원을 투입해오고 있음
 - * 지역균형발전 1.0체제 : 4개 정부 동안 체제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부재

• 지역균형발전 1.0체제의 재원투자 규모 •



* 자료 : 2020년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

- 지역균형발전 1.0체제는 극심한 국토의 불균형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정책에 해당
 -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동안 많은 재원을 투입함에 불구하고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장 대표적 지역불균형 지표인 인구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 인구의 50.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3개 지역이 나머지 14개 지역을 상회하는 상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율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2021
수도권	46.3	48.4	49.2	49.4	50.0	50.3
비수도권	53.7	51.6	50.8	50.6	49.0	49.7

- 2021년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대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
 - 전국 89개 지역 가운데 경기도의 연천, 가평, 인천의 강화, 옹진 4개를 제외한 85개 지역이 비수도권에 분포(행정안전부, 2021년 10월 발표)

02. 현재의 지역균형발전 체제의 문제점

- 경로의존에 의한 2000년대 초 구축한 중앙집권적 지역균형발전 체제의 답습
 - 4개 정부별로 중점을 두는 정책의 기조와 특별회계 재편 등 일부 변화를 제외하고, 2000년대 초에 설계한 시스템과 동일한 정책을 시행
 - * 공간적 초점을 광역이나 시도나, 회계의 무게 중심을 부처에 두느냐 지역에 두느냐 정도의 차이 존재

- 다만, 정책 틀에 큰 변화 없이 정책기조가 형평이나 효율이나에 따라 정책의 공간규모, 계획, 기구, 회계 등이 종속,연동되는 구조를 형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율 (단위:%) •

정책기조	공간규모	계획	기구	회계	비고
형평	중	시도 단위	국가균형위	지자체 편성	노무현·문재인 정부
효율	대	광역권 단위	지역발전위	부처 편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 4개 정부 동안 2000년대 초에 형성한 중앙집권적인 “지역균형발전 1.0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유
 - 중앙정부가 부처 일반 회계와 차별성이 없는 시책 메뉴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시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의 정책을 집행
 -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까지 특별회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취지와 철학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문제를 발생

• 지역균형발전 1.0체제의 특징 •

정책시행의 결과

-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한 정책추진으로 자율적인 지역 혁신창출 미흡
-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국가발전 위협

중앙정부	지자체
• 정책 주도자 지위 • 시책 메뉴, 가이드라인 제시 • 자원 배분	• 정책 자율성 부재 • 메뉴에 따른 사업 선택 • 분권이 미약한 자원 투자

03.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2.0 체제의 추진방향

- 2000년대 초 구축한 중앙집권적 지역균형발전 체제의 대전환
 - 방향은 균형발전 1.0체제의 가장 큰 문제인 중앙집권적 추진의 거버넌스 및 계획, 회계 등의 시스템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적인 정책의 틀로 변화
 - 기조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한 분권적 방식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저발전 지역을 지원
 - 기존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정책추진 대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collaborative)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 지역균형발전 2.0 체제의 방향 •

지역균형발전 1.0 체제	⇒	지역균형발전 2.0 체제
중앙집권적 배분체계		지방분권적 자율체계
분권과 균형 분리		분권과 균형 통합
Top Down 방식		Collaborative 방식
중앙정부 : 정책주도 지방정부 : 대리인격 집행		중앙정부 : 보충 및 지원 지방정부 : 정책주도

- 지역균형발전의 2.0체제의 정비 내용
 - 분권적 차원의 균형발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원과 시책의 지방이양 추진
 -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는 사업은 소관부처로 이관
 - 특별회계의 경우 부처 편성은 삭제하고 지자체 편성으로 구성하되, 광역 차원의 저발전지역, 기초 차원의 저발전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편
 - 회계편성은 시도 간으로 구성되는 광역계정, 기초 지자체 계정으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포괄보조금 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간 협력을 지원하는 계정 설치
 - 거버넌스의 경우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되,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실행력을 보다 배가하고 지자체의 참여와 주도성을 강화

• 지역균형발전 2.0 체제의 내용 •

구분	초점	내용	비고
시책과 재원	- 분권적 차원에서 재편	- 부처편성사업 폐지 • 부처 이관 •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이관	* 시책분권화
정책공간	- 광역지역 간 격차해소 * 다극 분산형 국토형성 - 기초지역 간 격차해소	- 광역 지자체 공간간의 발전격차 해소 * 시·도로 구성되는 5+3개 광역권 - 저발전 기초지자체 지원 * 2차원적 공간단위 설계	* 중앙정부는 발전이 뒤처지는 광역, 기초 지원강화
특별회계	- 회계 규모 확대 - 회계 재편	- 내년 예산 638.7조원의 2.0% - 지자체 자율편성(광역계정, 기초계정)	* 필요시 협력계정

출처 :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4
AP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일반 50 → 100만 원 카드 100 → 150만 원
모바일 50 → 150만 원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 상향

대한민국정부

4
AP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문화비 30 → 40% 전통시장 40 → 50%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연말까지
소득공제율 10%p 상향

대한민국정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열람신청 : 지방세(지자체 / 4.1.~), 국세(세무서 / 4.3.~)

대한민국정부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최대 4만 원 한도
주요 농축수산물
20~30% 할인

이용 :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

대한민국정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4

AP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긴급·임대주택 주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상담·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민국정부

4

AP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120만 원 지급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민국정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4

AP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토

SAT

2023년 4월 정책달력

1

최대 7일, 24시간 돌봄 제공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실시

신청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한민국정부

4

APR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

MON

2023년 4월 정책달력

3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상담 등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대한민국정부

알기쉬운 정책용어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

APR

MON

2023년 4월 정책달력

10

**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쪽방, 지하층 등 이주지원
버림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신청 : 국민·우리·농협·신한·하나은행

대한민국정부

4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

APR

MON

2023년 4월 정책달력

17

**4월 17일 ~ 30일
SRT 승차요금
시점·구간에 따라
최대 30% 할인**

대한민국정부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